



Jan.



# RICON

#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 산업동향

-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과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선제적 방안 마련 필요

### 정책동향

- 2025년 국내 모듈러 건축·주택 정책추진 동향 및 시사점
  - 정책의 방향성 및 우선순위 설정과 건설업계 저변확산 전략 필요

### 시장동향

- 건설업 매출액 500조 vs 5년만의 건설계약액 감소
  - 지표의 해석에 있어 건설업 매출액과 계약액간의 차이에 주의

## 산업동향

###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과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선제적 방안 마련 필요 -

이호일 부연구위원

(lhi0904@ricon.re.kr)

#### 1.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정책 현황

- ◆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이주수요를 생활권 내외의 주택 시장원리를 통해 흡수시키는 원칙 아래 이주수요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조성보다는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 수급방안을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수요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조성보다는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 수급방안을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토부는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는 가정하에 신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 물량을 포함할 경우 이주 가능한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 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의 경우 주변단지의 이주 시점을 고려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또한, 국토부는 면밀한 지역별 주택수급 동향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을 예측하고, 공공 및 민간의 분양·임대를 통한 다양한 주택공급을 위해 이주수요 발생 시 활용가능한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가 주택공급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국토부는 주택 시장원리를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와 '先 교통 後 입주 원칙'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 2. 1기 신도시 내외 주택수급 현황 분석

-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필요한 이주수요 물량과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을 비교하면 주택 공급물량이 이주수요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연도별·지역별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에 일시적인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이후 2년 이내에 관리처분 완료 가능성이 높은 가정하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년간 연평균 약 3.4만호의 이주수요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당의 경우 2026년 대규모 이주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주택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본 및 평촌의 경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공급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필요한 이주수요 물량과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을 비교하면 주택공급 물량이 이주수요 물량을 상회하고 있지만, 연도별·지역별 주택수급 상황이 상이하여 특정 지역에 일시적인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구분	이주수요 (단위: 천호)		주택공급 (단위: 천호)						
	5년 합계	5년 평균	5년 합계	5년 평균	연차별				
					2027	2028	2029	2030	2031
분당	64.7	12.9	99.21	19.8	21.8	6.8	5.4	35.9	29.4
일산	33.0	6.6	74.6	14.9	16.7	11.6	7.7	21.9	16.6
평촌	24.0	4.8	40.5	8.1	5.4	7.7	2.9	14.5	10.1
중동	28.0	5.6	103.6	20.7	17.9	28.4	15.5	27.9	13.8
산본	21.5	4.3	31.5	6.3	3.6	3.8	5.4	13.3	5.4
합계	171.1	34.2	349.4	69.9	65.3	58.3	36.9	113.5	75.4

자료: 국토교통부(2024.12),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 3. 국토부의 주택수급 보완방안

◆ 국토부는 ① 유희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② 기존 타 주택공급사업의 조기화, ③ 기존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관리처분 이연 등 주택 수급 보완방안을 통해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며, 나아가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도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임

- 국토부는 ① 유희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② 기존 타 주택공급사업의 조기화, ③ 기존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관리처분 이연 등 주택 수급 보완사항을 통해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유희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의 경우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공공 및 민간주택 7.7천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며,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희부지에 2029년까지 1.5천호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산본·평촌 신도시의 경우 LH 비축완료 부지에 2029년까지 2.2천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 기존 타 주택공급사업의 조기화의 경우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공급사업에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시점을 조기화할 예정임.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속도를 높이며,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임
- 기존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관리처분 이연의 경우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여 이주수요를 분산하되, 이주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앞당기고 타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임
- 따라서, 국토부는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도 대응이 가능한 주택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이주지원관리 TF팀의 설치,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정기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택수급을 관리할 예정임

#### 4. 1기 신도시 이주방안에 대한 시사점

- ◆ 2025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이주수요까지 발생할 경우 부동산 임대차시장이 과열될 여지가 크며, 주택 시장원리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주택 수급방안은 일시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1기 신도시의 이주수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선도지구' 단지를 선정한 가운데 이주민 전용단지 및 이주수요를 위한 주택공급을 하지 않는 대신 인근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임
  - 1기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203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1기 신도시 이주수요는 2027년부터 적게는 연평균 4만호에서 많게는 연평균 13만호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이주수요까지 발생할 경우 부동산 임대차시장이 과열될 여지가 큼
  -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증가시켜 주택 시장원리를 통해 주택수급을 관리하겠다는 국토부의 기본적인 이주수요 대응 방향성은 타당하나, 국토부가 제시한 주택수급 방안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인근 지역의 유희부지 및 주택공급사업 지역의 부족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1기 신도시의 이주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봄
- ◆ 국토부는 일시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이주수요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1기 신도시의 수요 및 공급 예측 분석을 통해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민간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형 오피스텔, 비아파트 공급 등 보다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토부는 일시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이주수요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1기 신도시의 수요 및 공급 예측 분석을 통해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국토부 주도하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속도를 올려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국토부는 이주수요를 주택 시장원리를 통해 흡수시킨다 하더라도 2025년부터 발생할 주택공급 부족현상과 1기 신도시 이주수요가 맞물리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즉, 주택수급 조절을 시장원리에 맡기되 민간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현실화 등 민간 주택공급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지원해야 함
- 또한, 국토부가 1기 신도시 분양·임대주택을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아파트보다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임대주택이나 공기주택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등 보다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설정해야 함

## 정책동향

### 2025년 국내 모듈러 건축·주택 정책추진 동향 및 시사점 - 정책의 방향성 및 우선순위 설정과 건설업계 저변확산 전략 필요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ihyu71@ricon.re.kr)

#### 1.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

- ◆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은 생산성 향상, 엔지니어링 해외수주 확대, 안전사고(사망자) 감축 목표를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 중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확산”의 추진과제로 “생산시스템 자동화·모듈화”를 위한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생산시스템 자동화·모듈화 추진전략 및 과제〉

주요 추진과제		추진시기					주관부서
		23	24	25	26	27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건설기준 정비 로드맵 수립 및 제 개정	■					기술혁신과
	건설기계 안전법령 등 정비	■					건설산업과
	SOC 성능시험장 조성		■				기술정책과
	세제, 금융 등 인센티브 추진	■					기술정책과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등 관련 기준 정비	■					기술정책과
	공공주택 발주물량 점진적 확대	■					주택건설공급과
	토목 부문 PC 확대	■					기술정책과
	OSC 발주가이드 제작		■				기술정책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주택건설공급과
	중고층 실증 R&D 추진	■					주택건설공급과
	OSC 전담조직 신설	■					기술정책과
홍보관 운영 등 인식 개선		■				주택건설공급과	

\* 자료: 국토교통부(2023),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

## 2. 국토부 OSC/모듈러 제도개선 추진계획

- ◆ 모듈러주택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사)스마트모듈러포럼 창립 총회(2024.3.7)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화건설(OSC)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현재 단계별·사안별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제조화건설(OSC)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배경 〉



**OSC공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자료: 국토교통부(2024), 제조화건설(OSC) 활성화 방안

- ◆ 5개 부문(산업생태계 조성,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지원체계 정비, OSC 기술개발 R&D)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산업생태계 조성’ 부문의 추진과제: 공업화주택 공공발주 물량 확대(2030년까지 연간 3,000호 목표), 사업모델 다양화(도심 내 소규모 주택사업에 모듈러 공급 등), 공공임대주택 기금 지원(주택도시기금 용자지원 확대 등), 공사비산정기준 개선(공업화 공법 특성을 고려한 기준)
- ‘제도개선(규제 완화)’ 부문의 추진과제: 모듈러주택 내화기준 개선(모듈 단위로 내화성능 확보 검토), 장수명주택 인증기준 보완(철골구조물의 평가기준 추가 등)
- ‘제도개선(인센티브 제공)’ 부문의 추진과제: 높이제한, 용적률 등 완화 적용(주택법 개정을 통한 사업성 제고),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효율 제고(처리기간 단축 등), 친환경주택 인센티브 제공 검토, 특례규정 합리화(감리, 바닥구조기준 등 공업화주택의 특성에 맞는 특례규정 도입 등)
- ‘지원체계 정비’ 부문의 추진과제: 업종분류체계 정립(모듈러 관련 기술·공법의 업종분류 명확화), 실적관리 체계 구축(업종분류체계 정립 후 업종별 실적관리체계 구축)
- ‘OSC 기술개발 R&D’ 부문의 추진과제: 2025년부터 모듈러 건축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및 실증 R&D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

### 3. LH공사 OSC 로드맵

- ◆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의 핵심 주체인 LH공사는 2024년 3월 연간 5,000호 발주계획 등을 담은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본 로드맵은 OSC 현황 분석을 통해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세부추진 방안으로서 1) 설계 표준화로 생산체계 혁신, 2) 핵심기술 선도, 3) 층간소음·장수명 성능강화 OSC 주택, 4) 제도 합리화의 4대 방안과 단기 중점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자료: LH공사 보도자료(2024.3.27)

- ◆ 4개 부문(설계 표준화로 생산체계 혁신, 핵심기술 선도, 층간소음·장수명 성능에 강점이 있는 OSC주택 추진, 제도 합리화)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설계 표준화로 생산체계 혁신: 표준평면 개발('24년 착수), LH개발 표준평면의 국가 표준화('25년 착수), 모듈러의 제품화(중장기 추진)
  - 핵심기술 선도: 국가 R&D를 통한 고층화 기술개발('25~'29년), 복합(하이브리드) 구조시스템 개발, 경량화(건식벽체를 시스템패널로 적용, PC 슬래브와 건식난방패널 결합 등)
  - 층간소음·장수명 성능에 강점이 있는 OSC주택 추진: 주택 층간소음 1등급, 장수명 최우수 등급의 고성능 OSC주택 구현을 위해 신기술 개발 및 관련 인증제도 보완
  - 제도 합리화: 감리, 지급지재, 분리발주 등 OSC 관련 건설규제에 대해 OSC주택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4.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 지금까지 건의 또는 추진이 검토된 바 있는 모듈러 관련 제도개선 이슈 및 문제점 진단 결과와 정부의 현행 제도개선 추진계획(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계획, LH공사 OSC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국내 모듈러 산업의 제도개선 이슈 및 문제점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모듈러 건축·주택 사업 및 기술개발 관련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됨
- 기술개발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중고층화 기술 확보
  - 내화, 층간소음 등 주거성능 개선
  - 장수명주택 적용기술과 연계
  - 프리패브 적용 확대 및 경량화
  - 가변성·수리용이성 향상
  - PC 구조와 모듈러 구조의 융·복합(하이브리드 구조)
  - 기술의 표준화, 모듈화를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표준모델, 표준평면 도입 등)
  - R&D를 통한 실증·선도사업 추진 등
- 제도개선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건축규제 개선 및 합리화(내화기준 등)
  - 친환경 등 인센티브 도입(높이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 모듈러 특성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확보
  - 표준화, 모듈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기술정책 수립
  - 제반 성능 및 기술기준 정비·수립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개선 및 모듈러 건축·주택에 특화된 인증제도로 전환
  -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와 연계
  - 지원체계 정비(업종분류, 실적관리 등)
  - 감리, 지급자재, 분리발주 등 제도적 애로사항 해소
  - 자금 활용 및 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상기와 같이 많은 제도적 이슈 및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추진 또는 반영된 사항은 거의 없으며, 일부 제도개선 과제는 아래와 같이 의원입법을 통해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서범수 의원(24.7.31):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 포함, 공업화주택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15% 이하), 높이제한 완화(15% 이하), 공업화주택 인정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 허영 의원('24.9.26):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명칭을 변경,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포함,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인정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 **대부분의 현행 법령들이 기존의 현장생산방식을 반영해 규율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령체계에 모듈러 관련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해당됨. 따라서 상기와 같이 검토된 제반 제도개선 추진과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됨**

- 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상기 제도개선 추진과제의 특성을 분류하여 그루핑하면 다음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측면의 추진과제
  -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측면의 추진과제
  - ‘시장 활성화 지원체계 정비’ 측면의 추진과제
  - ‘기술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측면의 추진과제
- 상기 4가지 영역의 우선순위 추진과제를 선별함에 있어 모듈러 건축·주택의 실질적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실질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가 프리패브 시공 및 패널화 공법을 중심으로 모듈러 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종에 모듈러 관련 기술 공법의 내용을 업종별 업무내용으로 포함시켜 지자체 등 소규모 모듈러공사 발주 촉진과 함께 업체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후 실적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모듈러 시장을 측정 및 관리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저변확산 전략과 함께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모듈러주택의 합리적인 건축규제 완화 적용이 필요함

## 시장동향

### 건설업 매출액 500조 돌파 vs 5년만의 건설계약액 감소

- 지표의 해석에 있어 건설업 매출액과 계약액간의 차이에 주의

이은형 연구위원(eunhyung@ricon.re.kr)

#### 1. 2023년의 건설업 주요 지표는 종전까지의 호황을 반영

◆ 2023년의 국내·외 건설업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지표를 기록함. 특히 건설업 매출액은 500조원을 넘어서는 역대급의 실적을 나타냄

- 전년 대비 기업체 수는 0.7%(652개) 증가(단 전문직별 공사업은 0.1% 감소), 종사자수는 4.0%(7만명) 증가, 매출액은 9.9%(45조 7천억 원) 증가, 부가가치는 3.4%(5조 원) 증가함. 이는 지난 '19년~'22년간 건설업 호황의 여파로도 판단할 수 있음
- 통계청의 '2023년 건설업조사'는 건설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중 2023년에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됨('24.12에 기업실적 부문, '24.8에 공사실적(잠정)을 발표)

건설업 주요 지표

구분	'21년	'22년	'23년	전년대비('23/'22)	
				증감	증감율(%)
기업체수(개)	85,533	87,239	87,891	652	0.7
수도권	30,277	30,971	31,056	85	0.3
수도권 외	55,256	56,268	56,835	567	1.0
종사자수(천명)	1,652	1,740	1,810	70	4.0
종합건설업	550	613	636	23	3.7
전문직별 공사업	1,102	1,127	1,175	48	4.2
매출액(십억원)	410,301	460,975	506,722	45,748	9.9
종합건설업	253,173	292,521	506,722	36,295	12.4
전문직별 공사업	157,128	168,454	177,906	9,453	5.6
국내 매출액	382,592	429,467	465,343	35,877	8.4
해외 매출액	27,708	31,508	41,379	9,871	31.3
건설비용(십억원)	390,938	439,930	490,508	50,577	11.5
부가가치(십억원)	133,208	146,107	151,094	4,987	3.4

## 2. 향후의 건설업 지표에는 그간의 업황하락이 반영될 것

### ◆ 건설업 매출액과 달리 건설계약액은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차년도에는 건설업 주요 지표의 하락가능성이 높아짐

- 건설계약액은 공사계약 시점에서의 대상금액으로서 이를 공사수주액으로 인식해도 무리가 없음. 주로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인식되며 국내 기업들은 수주잔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임
- 반면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건설공사의 매출액은 진행율을 기준으로 인식되므로, 특정 연도에서의 매출액은 최근 수년간의 계약액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남(건설공사액도 동일)
- 만약 건설계약액의 증감이 1~2년 이상 지속된다면 향후의 건설업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게 됨. 그런 이유로 이번 2023년의 건설업 지표에서도 매출액의 증가와 건설계약액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건설공사액 및 건설계약액 증감 (단위: 십억 원, %)

구분	'21년	'22년	'23년	증감		증감률(%)	
				'22-'21	'23-'22	'22/'21	'23/'22
건설공사액	307,658	343,046	359,180	35,388	16,134	11.5	4.7
국내건설	281,099	310,470	318,609	29,371	8,139	10.4	2.6
해외건설	26,559	32,577	40,572	6,018	7,995	22.7	24.5
건설계약액	314,995	338,290	297,517	23,295	-40,773	7.4	-12.1
국내건설	279,356	301,015	257,798	21,659	-43,217	7.8	-14.4
해외건설	35,639	37,274	39,719	1,635	2,445	4.6	6.6

등록업종별 건설계약액 (단위: 십억 원, %)

구분	건설계약액				증감	증감율
	'22년	구성비	'23년	구성비		
종합건설업	251,799	74.4	211,177	71.0	-40,622	-16.1
전문업종 건설업	86,491	25.6	86,340	29.0	-15.	-0.2
전 문	23,735	7.0	25,499	8.6	1,764	7.4
설 비	9,401	2.8	9,867	3.3	466	5.0
시 설 물	2,848	0.8	0	0.0	-2,848	-100.0
전 기	27,992	8.3	28,379	9.5	387	1.4
정보통신	16,864	5.0	17,061	5.7	197	1.2
소 방		1.7	5,535	1.9	-117	-2.1